

[한국경제] 747에서 474로 돌아온 근혜노믹스

2014.01.17 | 여경훈 연구원 | khyeo@saesayon.org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747은 '경제대통령'이라 자부하던 MB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MB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4%대 부진한 경제성장률로 국내경기와 고용사정이 매우 나빠졌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동시에 자신을 '경제대통령'이라 치켜세웠고,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표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각 경제 지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투자증가율	내수증가율	일자리
참여정부(A)	4.33	2.93	3.20	3.22	126.4만
MB정부(B)	2.91	3.31	-0.02	1.66	124.8만
차이(A-B)	1.42	-0.38	3.22	1.56	1.6만

*한국은행, 단위(%)

그렇다면 자칭 경제대통령인 MB 5년의 경제 성적표는 어떠했을까? 먼저 MB가 부진하다고 혹평한 참여정부 5년 경제 성적표와 비교해 보자. 2003~7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상승률은 2.9%를 기록하였다. 반면 MB5년 경제성장률은 2.9%로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은 3.3%로 상승하였다. MB 5년은 참여정부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4%p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은 0.4%p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초라한 성적표다.

2014년 전망 보고서

특히 ‘친 기업’을 모토로 내걸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지만,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 내수증가율은 3.2%에서 1.7%로 푹 떨어졌다. 연간 60만개,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어땠을까? 5년 동안 124.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연평균 25만 개로 당초 공약의 40%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2]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추이

	03~07	08~12	08	09	10	11	12
경제성장률	4.33	3.08	2.3	0.3	6.2	3.6	2.0
국민소득	21,632	22,708	19,161	17,041	20,562	22,451	22,708
경제순위	13위	15위	15위	15위	15위	15위	15위

*한국은행, IMF, 단위(% , 달러)

5년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및 10년 내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1076달러 늘어나는데 그쳤고, 경제순위는 2008년 15위로 두 단계 하락, 전혀 변함이 없었다.

돌아보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을 정도다. 왜 이렇게 경제 성적이 형편없었을까? 그들 말대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초기조건과 대외환경이 나빠서였을까? 참여정부 집권 첫 해인 2003년 또한 카드 사태에 따른 신용버블 붕괴로 경제성장률이 0.3%로 푹 떨어졌다. 2008년 0.2% 성장률과 거의 차이 없다. 또한 세계경제는 침체에 빠졌지만, 환율 조건은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양호하였다. 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초기조건이나 대외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실상은 경제정책의 실패다.

1. 줄푸세-MB노믹스-근혜노믹스, 이름만 바꿔 달아

MB는 747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투자활성화 조치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07년 발간된 MB 대선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 기업·친 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MB는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박근혜 캠프가 제시한 ‘줄푸세’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정책기

2014년 전망 보고서

조의 약자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노동자의 저항에 대항하는 개념이 법치라 할 때, 줄푸세란 다름 아닌 감세,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각각 대변한다. 즉 이명박의 MB노믹스와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름만 달리할 뿐 내용은 같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꾸었듯, 줄푸세도 MB노믹스로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MB는 '선진화'를 핵심 모토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금융, 미디어, 의료, 서비스업 등 각종 '선진화'의 지향은 그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주국의 심장부가 맥없이 무너져 내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MB 정부는 줄푸세 공약이 제시한 정책기조에 따라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를 폐지했고, 각종 부동산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벌과 금융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베풀어주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외치며 다른 사회로 전환하고 있을 때,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엔진을 더욱 세차게 돌렸던 것이다. 그 정책실패의 결과가 MB의 초라한 경제성적표다.

그러면 새로 취임한 박근혜 정부의 1년과 앞으로의 4년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박근혜는 최근 신년구상에서 MB의 747과 유사한 474 비전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율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연7%의 경제성장률이 4%, 국민소득이 4만 불에서 3만 불로 낮아졌고, 일자리 300만 개가 고용율 70%로 달라졌을 뿐이다. 747이 474로 숫자 배열만 달라져 목표치만 하향 조정되었을 뿐, 그 기조는 그대로 계승하였다. 두 정부는 숫자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공약이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 행동양식도 동일하다.

MB 정부와 비교하여 혹시 정책기조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박근혜는 474를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상화, 창조경제, 그리고 내수활성화다. MB의 공기업선진화와 투자활성화가 이름만 바뀌었고, 창조경제는 그들도 실체를 모른다. 게다가 MB정부 후반기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음을 기억하라. 그냥 말잔치에 불과하다.

2014년 전망 보고서

사실 지난 해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경제정책은 부동산 부양정책이었다. 경제민주화 제도 개혁은 생색내기에 그쳤다. 그나마 지난 7월 초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투자가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완전히 바꾸었다. 지난 해 하반기 3·4차 투자활성화 대책, 그리고 12월 국회연설과 이번 신년구상을 통해 향후 박근혜 4년을 짐작할 수 있는 정책기조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바로 투자활성화 명목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박근혜 대통령 신년구상 中)”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하반기에만 투자활성화 대책을 세 차례 발표하였다. 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재벌이 원하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되었고, 11월 말에는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었다.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에 버금가는 규제완화 정책들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민영화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대거 망라되었다.

‘친 기업’ 모토를 내걸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의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꾀한 MB노믹스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특히 “공기업을 효율화하고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민영화하겠다”던 MB가 집권 후반 포기했던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서 MB노믹스 2.0이라 할 만하다.

2. 근혜노믹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물론 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있다. 박근혜의 신년 구상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지난 5년 MB정권의 실패가 반복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다. 그 근거를 경제적으로 따져 보자.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경제이론은 이른바 낙수효과¹⁾(trickle-down effect)에 근거하고 있다. 즉 “기업의 이윤을 늘려야 투자가 증가

1)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한다”는 명제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낙수효과의 시초는 1990년대 초반 김영삼의 국가경쟁력 논리다. 김영삼은 임금억제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늘리려고 하였다. MB의 감세정책 역시 투자의 원천은 ‘이윤’이며 법인세는 세후이윤을 늘리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의 재정축소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늘려주려는 의도다. 임금억제와 감세는 가계와 국가의 몫을 기업으로 돌리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정부 규제완화 환경, 거시안정, 지역균형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박근혜의 규제완화 논리는 공공성과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기업과 정부 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방해한다고 본다. 즉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발상이다. 진입장벽 해소와 경쟁촉진을 명목으로 공기업 민영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의 투자가 늘 것이라 기대한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이 자영업의 소득기반을 재벌이 잠식하는 것이라면,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자원과 소득 지배력을 재벌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는 재벌의 오랜 숙원이며, SK를 비롯한 적지 않은 재벌이 민영화 정책의 수혜로 성장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오로지 재벌 잘되라고 엄청난 혜택을 베풀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MB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고, 규제개혁, 선진화, 투자활성화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상 유례 없는 원화 저평가의 대외환경, 정부의 감세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정책은 명백히 실패하였다. MB5년 연평균 투자증가율 -0.02%는 이를 잘 보여준다.

3. 왜 내수는 침체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수를 늘릴 것인가? 처방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잘 짚어야 한다. 내수는 크게 민간소비²⁾와 민간투자³⁾로 구성된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내수와 수출, 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권을 둔 주장이다

2) 일정기간중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지출

3) 사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사적투자, 즉 민간투자라고 하며,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자를 공공투자, 즉 정부투자라고 한다.

2014년 전망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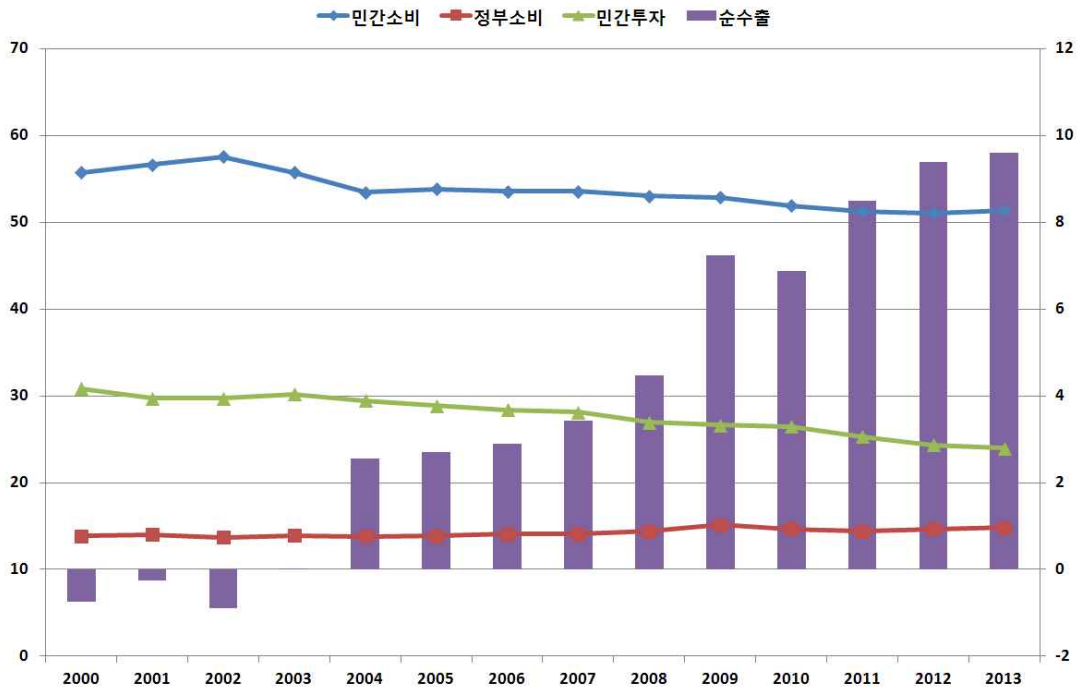
[표 3] 전두환 정부 이후 내수 및 수출증가율 추이

	1981~1996	1997~2012	2007~2012	2013.3q
내수증가율(A)	9.2	2.3	1.3	1.8
수출증가율(B)	12.1	10.6	6.6	3.8
GDP성장률(C)	9.0	4.1	2.9	2.4
(C-A)	-0.2	1.8	1.6	0.6

*내수는 GDP 계정 상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으로 계산, 단위(%)

외환위기 이전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 간 격차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그 격차는 1.8%p로 확대되었다. 수출과 내수의 성장률 격차는 2.9%p에서 8.3%p로 크게 늘어났다. MB5년만 보면 연평균 내수증가율은 1.3%로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3분기까지 박근혜 정부 1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1] GDP 대비, 소비, 투자, 순수출 비중 추이(2000-2013)



자료: 한국은행, 단위(%), 순수출(우)

최종수요⁴⁾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1996년 45%에서 작년 35%까지 10%p 가량 떨어

4) 생산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 중에서 다른 여러 산업에 의하여 원료 등의 중간생산물로 구매되어, 다시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중간수요가 아니라 최종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수요를 말한다.

국민경제 계산에서는 개인소비·민간설비투자·정부지출·수출을 최종수요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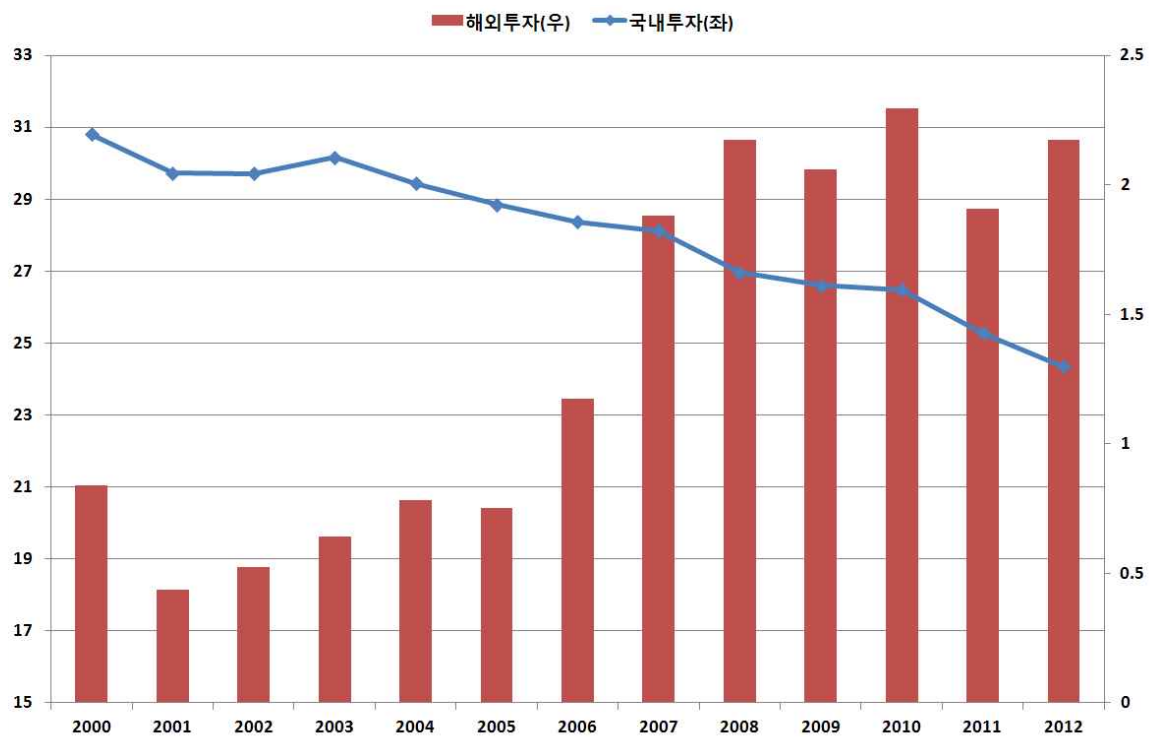
2014년 전망 보고서

졌다. GDP대비 소비비중은 1996년 60%에서 2012년 51.1%까지 하락하였다.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비중은 2000년 86.5%에서 2012년 75.4%로 11.1%p 떨어졌다. 작년 투자활성화 중심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내수비중은 75.3%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는 GDP의 10%에 달하는 순수출의 증가로 상쇄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 투자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정책으로 내수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소비를 늘리고, 정부와 중소기업의 투자를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투자침체의 원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의 혜택을 받아 세후순이익을 늘린 재벌 대기업은 국내투자보다 다른 곳에 심혈을 기울였다.

첫째, 해외투자에 더 치중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계의 소득 정체로 수요가 부족한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을 더 공략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났지만, GDP에서 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8%에서 2012년 24.3%로 줄어들었다. MB 5년으로 한정하면, 28.1%에서 24.3%로 3.8%p 감소하였다. 국내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 비중은 2000년 0.8%에서 2012년 2.2%로 증가하였다. 2001년 22억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투자 금액은 2012년 246억 달러로 11배 늘어났다.

[그림 2] GDP 대비 국내·국외 투자 비중 추이(1990-2012)



자료 : 한국은행(단위:%)

2014년 전망 보고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부문의 천문학적인 이윤에 따라,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섰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고용은 지난 4년 동안 15만8천명에서 27만 명으로 71%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창출된 고용은 불과 8%에 불과하였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천문학적 이윤으로 미국, 터키, 중국 등 해외 공장을 연달아 건설함에 따라 국내 생산 비중은 2005년 73%에서 작년에는 43%로 떨어졌다.⁵⁾ 둘째, 금융투자에 더 치중했다. 금융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4조에서 2012년 42조로 거의 네 배 가량 증가하였다. MB5년으로 한정하면, 23조에서 42조로 81% 늘어났다. 반면 금융산업의 고용은 같은 기간 78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불과 6만 명(7.7%)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한정된 자원이 금융과 투기 부문에 쏠림에 따라 실물부문의 생산적 투자와 R&D가 저해된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사내유보⁶⁾ 이윤을 축적하고 있다. 금융 및 거시경제의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 대외 개방도가 높아 환율, 자본수지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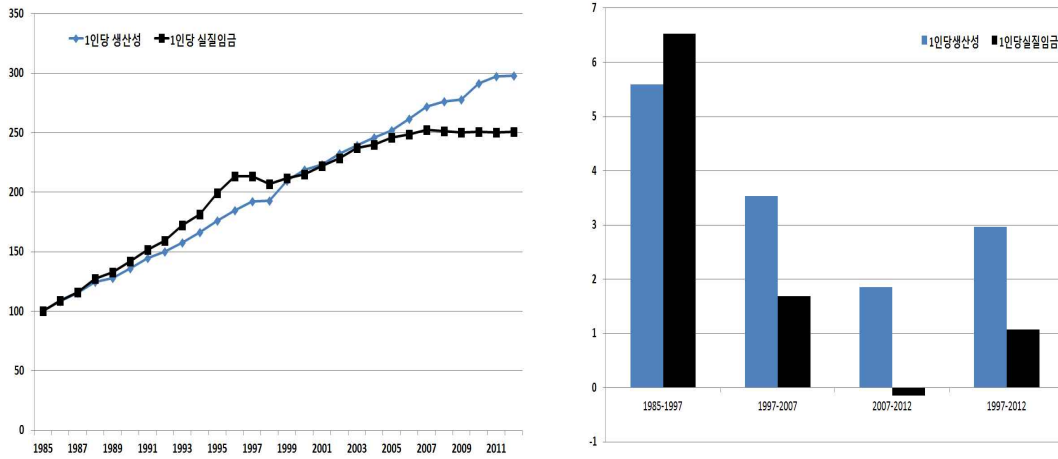
더불어 민간소비의 증가세와 성장기여도가 GDP에 비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음 몇 가지 경제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다.

첫째, 부자기업-가난한 가계 현상으로 대변되는 분배구조의 악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분배구조 악화의 주된 원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세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1인당 실질임금 증가율(6.5%)은 외환위기 이전(1985~97) 생산성 증가율(5.6%)보다 0.9%p 높았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1997~2012) 실질임금 증가율(1.1%)은 생산성 증가율(3.0%)을 크게 하회하여 격차는 1.9%p로 확대되었다. 특히 MB5년 1인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0.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파이낸셜타임즈(11/18), South Korean companies: Needed on the home front

6) 기업이 순이익 가운데 세금이나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 안에 적립되는 금액. 내부유보(内部留保)라고도 한다. 이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대하여는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에 유리한 자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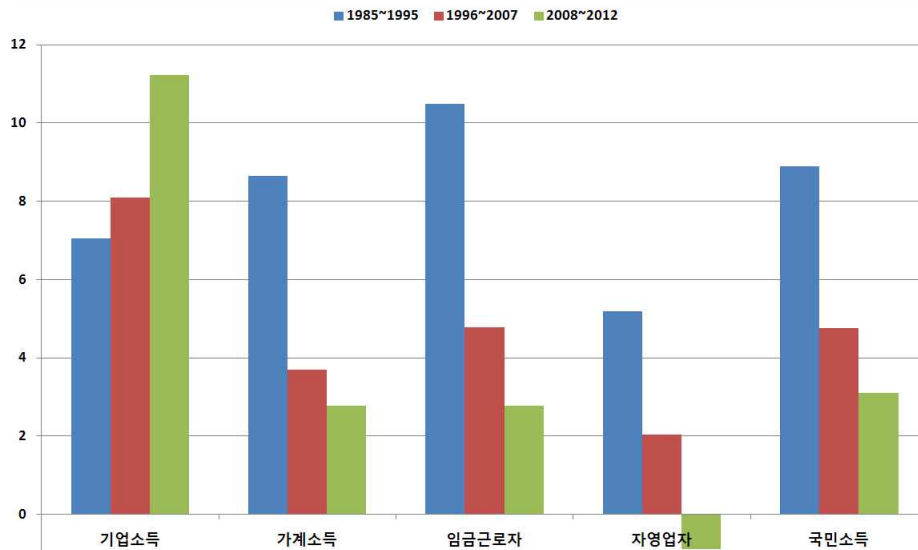
[그림 3] 경제 전체 1인당 생산성-실질임금 갭(1985-2012)



자료: OECD, 한국은행, 단위(좌:1985=100, 우:%)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재벌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2005~11년 도소매업 자영업자가 28만 명 감소한 상황에서 SSM⁷⁾의 점포수는 세 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전통시장 점포수는 4만개 정도 줄어들고 매출액도 10% 이상 감소하였다.⁸⁾ 또한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2005년 5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42.5%에서 53.3%로 증가하였다.

[그림 4] 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소득증가율 추이(1985-2012)



자료 : 한국은행(단위:%)

7)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슈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점포를 제외한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을 지칭한다. 대형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 틈새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삼는다.

8) 한국은행(2013),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

2014년 전망 보고서

위 그림에서 보듯,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소득 증가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소득은 외환위기 이후 국민소득 증가율(4.7%)의 절반 이하(2.0%)로 떨어졌다. 최근 MB 5년 자영업자 소득은 연평균 -0.9%로 자영업의 소득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분배구조 악화는 계층 간 소득분배 악화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소득규모가 일정하다고 할 때, 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집중될수록 경제 전체의 소득규모가 감소한다. 즉, 분배구조의 악화는 민간소비 위축에 증충적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도 원인이다. 과거 가계부채 증가는 유동성 제약 완화와 부의 효과를 통한 소비 확대로 이어져 민간소비 하락의 충격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와 소득 축소로 이어져 채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2012년 17.2%에서 19.5%로 2.3%p 상승하였다.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미국의 동 비율이 14%였음을 상기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셋째, 전세가격 상승과 노후 불안에 따른 소비억제와 예비적 동기⁹⁾의 저축 증가다.

지난 6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 마디로 말해, '빚내서 집사라'는 가격부양 정책이었다. 이의 결과, 지난 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7.2%, 서울은 9% 상승하였다. 2009년 이후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0%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3%)의 3.8배, 가계소득증가율(21.2%)의 2.4배에 달한다. 전세가격은 매년 10%씩 상승하였다. 따라서 계약이 갱신되는 2년 주기마다 기존 전세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전세가격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거나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전세대출은 2009년 말 33.1조에서 작년 6월말 60.1조로 79% 증가하였다. 전세대출 비중은 50대 미만이 73.4%를 차지하고, 이들의 전세대출 증가율은 86%에 달한다. 따라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9%에서 작년 72.2%로 5.7%p 떨어졌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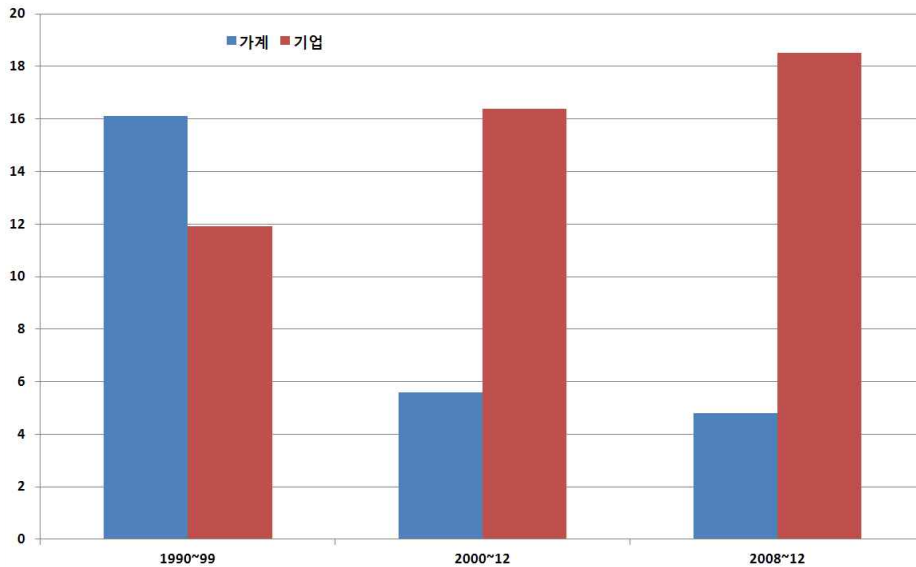
9)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불의의 사태나 기회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10) 한국은행(2013), 금융안정보고서

2014년 전망 보고서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40세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 4~50세는 전세자금 마련, 60세 이상은 급격한 고령화 진전과 취약한 노후 복지에 따라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대비 2012년 소비성향은 60대 가구에서 -5.9%p, 70세 이상 가구에서는 -6.8%p나 감소하였다.¹¹⁾

[그림 5] 시기별, 가계와 기업의 저축률 추이(1990-2012)



자료 : 한국은행 (단위:%)

GDP에 비해 민간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 가계는 가처분 소득¹²⁾의 압도적인 비중을 소비에 사용하고 있다. 가계의 연평균 저축률은 90년대 16%에서 2000년대는 5.6%, MB5년은 4.8%로 떨어졌다. 가계저축률 하락은 중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수요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하는 소비안정성이 약화되면 기업의 투자심리 또한 위축된다. 즉 최근 한국경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수침체, 가계부채, 소비위축, 저축률하락 등은 구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부유한 기업, 가난한 가계'로 대변되는 가계소득 정체와 양극화 현상이 놓여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우선,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성향을 제고하면 가계부채만 늘릴 우려가 있다. 또한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는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연평균 저축률은 90년대 11.9%에서 2000년대 16.4%, MB5년 18.5%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내수활성화의 단서가 있다. 문제의 근원이 임금상승률 정체와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잠식이라 할 때, 처방 또한 분명하다. 즉 가계부

11) LG경제연구원(2013), 노후대비 부족한 고령층 소비할 여력이 없다.
 12) 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2014년 전망 보고서

채 연착륙을 고려할 때, 내수활성화의 출발점은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과거 친 기업 정책 → 기업이윤 증가 → 해외투자, 금융투자, 유보이윤 증가로 순환이 종결되었다. 기업의 호주머니가 국민경제의 블랙홀이었다. 국민경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가계소득 증가 → 내수활성화 → 투자증가 → 고용증가 → 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 즉 소득중심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재정 및 통화 정책, 그리고 구조 개혁을 포괄하는 내수활성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재정 및 통화정책은 총수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를 개선하는 방향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총수요가 부족하고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 범위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대출금리 하락은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부채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 상환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려 대출비용 하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부채비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부양정책 기조가 전환하지 않으면, 기준금리는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행은 물가 및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경단련을 비롯한 재계 3단체가 임금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노력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임금억제, 법인세인하, 규제완화 등 노동자와 국가의 몫을 수출대기업으로 돌리는 경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친 기업 정책이 친 가계, 친 국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이 임금정체라고 할 때, 임금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상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2차 재분배고, 임금인상은 1차 재분배다. 가계소득 제고와 분배구조 개선에 직접적 효과를 주는 것은 임금인상이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유출입 규제와 금융거래세¹³⁾ 도입 등 금융시장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연관이 높은 설비투자는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승할 경우 투자심리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8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업이 과도하면 투기적 수요와 금융 수요에 따라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과도한 금융자유화를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13)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4년 전망 보고서

넷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 과거 경기가 나아지면 자영업 소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의 소득기반이 잠식되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고, 임대료, 수수료, 고금리 등 자영업 맞춤형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의 5대 서비스업종(관광, 금융,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규제완화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 기반을 더욱 잠식할 우려도 있다.

다섯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 최근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GDP 대비 정부의 사회지출 비중은 2000년 4.8%에서 2012년 9.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복지공약 후퇴에서 보듯 복지를 비용으로 보는 편협한 사고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2012년 GDP 대비 세수 규모는 26.8%로 OECD 평균 34.1%의 78.6%에 불과하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가계의 세후소득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유보임금 증가로 임금인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세전 세후 지니계수 차이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소득재분배 확대로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최근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 '법치'의 정치적 표현이다. 그러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긴요한 분야는 바로 분배구조 악화다. 지난 20여 년 간 가계와 정부의 몫을 기업으로 돌리는 친 기업 정책의 결과, 부유한 기업, 가난한 가계, 무능한 정부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는 가계소득 정체,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내수침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기업 앞에서는 '투자해 달라' 읍소하며 각종 혜택을 베풀고, 노동자 앞에서는 탄압하며 임금인상 억제를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본 모습은 아니다. 그런 정부를 약탈 정부라 한다. 정부의 진정한 모습은 다양한 계층과 이익의 균형추를 맞추는 사회적 조정자 역할이다. 그럴 때에만 공평한 사회, 유능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첫 걸음은 정부정책의 정상화다. 새사업

2014년 전망 보고서

2014년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15일	세계경제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1월 16일	한국경제(1)	스스로 지뢰밭을 만드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1월 17일	한국경제(2)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1월 20일	복지정책(1)	추후 공개	이은경
1월 21일	복지정책(2)	추후 공개	이은경
1월 22일	주거정책	추후 공개	강세진
1월 23일	돌봄정책	추후 공개	최정은
1월 24일	노동·고용	추후 공개	김수현
1월 25일	종합	추후 공개	새사연

2014년 전망 보고서 발간

불안한 미래,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2014년 전망 보고서.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제/노동/주거/복지 분야]

정회원 가입하기

새사연은 회원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독립 민간 연구원입니다.
2012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국내 100대 싱크탱크 4위, 더 나아가겠습니다.